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금융기관(안 제2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농·수협은행이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의 금융기관 정의*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률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대형 금융회사 자체정상화 및 부실정리계획제도의 적용이 어려움

* 「은행법」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금융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나, 농·수협은행은 「농업협동조합법」과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음

※ 농·수협은행은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대형금융회사에 대한 추가 자본비율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음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을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의 금융기관 정의에 추가하되, 법률 제2장의2에 한정함을 명시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대형금융회사 자체정상화 및 부실정리계획제도가 농·수협은행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게 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2.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대상 금융기관 종류(안 제4조의2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대상 금융기관의 종류를 국제 기준, 현재 선정대상 금융기관 등을 고려*하여 지정할 필요

* 바젤은행감독위원회(BCBS) 권고에 따라, 금융위는 2016년부터 매년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중 일부를 '국내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'으로 선정하고 있음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종류를 「은행법」에 따라 설립된 은행(농·수협은행 포함) 및 「금융지주회사법」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로 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법률유보 원칙을 충실히 따르고, 현재 운영중인 '국내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'(D-SIB) 제도와의 정합성을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3. 자체정상화계획 작성·제출 관련 세부사항(안 제4조의3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직접 작성하는 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 항목을 구체화하고, 그 제출 절차를 규정할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자체정상화계획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, 예상되는 경영 위기상황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,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함
- 또한, 자체정상화계획의 작성기준·방법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자체정상화계획의 작성·제출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업무 수행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4.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을 위한 세부사항(안 제4조의4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자체정상화계획·부실정리계획 승인을 지원하는 자문기구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심의위원회 위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중 1인(위원장)과 4인 이내의 금융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
- 금융 분야 민간 전문가의 자격요건 및 임기를 규정하고, 심의위원회의 의결 요건 등을 규정
-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비밀준수의무를 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심의위원회가 객관성 및 전문성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자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5. 기한 전 계약종료권의 효력기간(안 제4조의5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9제1항에 따라, 금융위원회가 행사하는 기한 전 계약종료권 일시정지의 효력 기간을 명확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금융위원회가 적격금융거래에 대하여 기한 전 계약종료권을 일시정지할 수 있는 기간을 일시정지 결정이 있는 때부터 최대 2영업일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간까지로 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일시정지 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, 일시정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적격금융거래 상대방의 권리제한을 최소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6. 권한의 위탁(안 제6조의2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자체정상화계획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고, 부실정리계획 수립·작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한을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위탁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(법 제9조의4제4항)·자체정상화계획 제출의 접수(법 제9조의7제2항)·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이행결과의 접수(법 제9조의9제3항)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
-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(법 제9조의5제4항)에 관한 권한을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위탁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위탁하는 권한과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